

“기억의 투쟁”... 광주 곳곳 세월호 추모 행사

10주기 연대 걷기·기억 문화제 등 “국가 잊으라 강요해도 행동할 것”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와 ‘2024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리는 등 광주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지역 교원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이 지난 13일 광주 시내 일원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를 가졌다.

오전 9시부터 양림미술관, 전남대 정문, 광주시청에서 각각 출발하는 3개 코스로 운영됐다.

양림미술관에서 출발한 1코스에서는 교사들과 학생, 시각장애인, 봉사활동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3·1만세운동길, 남구평화의소녀상, 금남공원을 지나 5·18민주광장으로 향했다.

2코스는 전남대 정문에서 북구청 평화의 소녀상-푸른길 따라 5·18 민주광장으로, 시청에서 시작된 3코스에서는 달리기 코스와 걷기 코스가 동시에 진행됐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정민서(19)양은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하게 돼 뿌듯하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5·18기념재단과 광주지역 교원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70여명이 지난 13일 광주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아픈 현대사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열 살배기 아들과 함께 온 오창환(43)씨는 “이런 연대를 통해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잊어버리길 강요하지만, 진상규명되지 않는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이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54)씨는 “딸이 세월호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세월호 소식을 접하며 공황장애를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며 “팽목항에서 봤던 304명의 영정사진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어떤 정부이든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국민들이 국가의 위기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피눈물 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이해중(42)씨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했다. 4·5월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여러 단체와 연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

광장에서 청소년 지원단체 ‘문화행동 S# ARP’와 ‘광주시 봉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최한 ‘2024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청소년들은 노란 팔찌 만들기, 응급처치 교육, 생활안전퀴즈 등 15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고, 안전 사회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연·전시도 선보였다.

광주 동신여중 동아리 ‘마중물’의 한희주(15)양은 “동아리 친구, 후배들과 봉사하면서 희생된 언니, 오빠들을 기리기 위해 나왔다”며 “어린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봤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희준씨는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아이들이 체험 부스를 통해 CPR, 압박붕대 감는 법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문미옥씨는 “많은 단체가 잊지 않고 함께 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매달 한 번씩 진도 팽목항에서 기억 순례도 이어가는 중이다.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광장에는 세월호참사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시민 분향소가 설치돼 오는 16일까지 운영된다.

글·사진=박찬·윤준명 수습기자

범죄용 대표통장 거래한 일당 30명 집유 등 선고

범죄에 쓰일 대표통장을 사고판 일당 30명이 무더기 적발돼 벌금·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씨(47)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이 계좌에 5200만원을 입금하자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폭이거나 무직, 학생인 나머지 피고인들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광주지역 폭력조직 등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달에 80만원에서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계좌 양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조직은 이들에게 빌린 계좌를 대표통장처럼 사용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의사 B씨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3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주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돼 위법성이 크다”며 “피고인 중 횡령죄를 추가로 저질렀거나, 후속 범행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전남 단독 의대 공모’ 서부권 반발 확산

목포대·정치권, 공모 철회 요구
도의회, 내일 긴급 현안 질문
김 지사, 회동 통해 당위성 설명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단독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전남도의 공모 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 과정 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과 박홍률 목포시장 등 서부권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는다. 이후 오는 18일에는 이병은 순천대학교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목포·순천 대학 총장 및 지자체 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공모 방식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대학을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정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도는 한 달 안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용역기관 선정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초까지는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는 정부의 전남권 의대 설립 의지를 확인하며 기존에 추진하던 목포와 순천의 통합의대 방안을,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 추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도가 단독 의대 추진안을 내놓기 전부터 ‘순천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던 동부권의 경우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목포대를 비롯한 전남 서부지역 정치권 등은 공모에 따른 의대 유

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대는 “도가 외부기관에 의대 입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 공공성과 낙후지역 의료공백 해소라는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공모 절차가 아닌 도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을 바라고 있다.

22대 총선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익 의원(목포)도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지를 염원하며 노력해 온 시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목포지역은 지난 1990년 전남에서 최초로 문교부에 ‘91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34년간 20여차례의 의대 신설에 나섰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해남·신안군의회 등 서남권 기초의회에서도 전남도에 의대 공모 방침 철회와 목포대 의대 설립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동·서부권 통합의대에서 단독의대 공모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선회한 배경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의대유치추진단(TF) 소관 변경’ 사유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16일 개최되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경찰 또 음주운전... 고강도 문책도 무위

올해 5번째 적발...여론 ‘못매’

광주에서 현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들어 서만 벌써 5차례다.

광주 북부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동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는 등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A경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경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잇따른 현지 경찰들의 음주운전에 고강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5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서부경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면허 취소 수칙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내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집중 감찰 조사를 받아 서부경찰서장 징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 발령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특별 경보를 내렸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특별 감찰 기간인 지난 11일까지 직원 회식을 전면 금지하고 내부 숙취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노조 격인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또한 지난달 “조직과 동료 보호 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호소한다”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음주 사고에 광주경찰은 여론의 못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경찰관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 ‘지휘 책임’까지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4건이었다.

정성현 기자

광주·전남 이틀간 최대 80mm 비

최고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주말이 지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16일까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mm, 남해안과 지리산부근은 80mm다.

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다.

15일 아침최저기온은 14~17도, 낮최고기온은 17~21도가 되겠다. 정성아 기자